

# ‘이재명 퇴진론’ 수면 아래로...당직개편 변수

### 인적 쇄신 일부 수용 모양새

### 강성 비명계 ‘퇴진론’ 줄어

### 사무총장 거취 재점화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당내홍이 일단 수면 아래로 들어가는 모습이다. 이 대표가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 등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인적 쇄신 요구를

일부분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계파간 갈등의 거친 기운이 빠져나갈 ‘분출구’가 만들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 24일 호남 몫 지명직 최고위원인 임선숙 최고위원의 사의를 수용했다. 아울러 전략기획위원장, 일부 대변인 등을 비롯한 주요 당직자의 추가 교체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대표의 핵심 측근 그룹인 ‘7인회’ 소속 김병욱 정책위원회 수석부위원장, 김남국 미래

사무부총장의 교체도 거론돼 주목된다. 이들을 당직에서 물러나게 하고 친명(친이재명)계 색깔이 얇은 인물들을 배치한다면 화합·탕평의 의미를 부각할 수 있다. 임 최고위원의 자리에 비명계인 송갑석, 이병훈 의원 등이 후임으로 거론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대표는 늦어도 금주 내로 당직 개편을 통한 인적 쇄신을 단행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분위기에서 강성 성향의 비명(비이재명)계 일부 의원을 제외하면 퇴진론은 일단 힘을 잃을 가능성이 커보인다. 다만, 당내에서는 인적 쇄신의 수위가 비명계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또 다른 갈등이 시작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비명계가 요구하는 인적 쇄신의 핵심은 조정식 사무총장이라는 게 대체적인 해석이다. 사무총장이 내년 총선 공천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사무총장을 교체해야 인적 쇄신의

진정성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를 향해 ‘쓴소리’를 이어 온 당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5선이 사무총장을 하는 것은 모양이 안 좋다”며 “이 대표가 (인적 쇄신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말을 얼마나 들을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결국 이번 당직 개편에서 조 사무총장이 유임되면 ‘측근 지키기’라는 비난과 함께 이 대표에 대한 퇴진론이 다시 고개를 들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쌍방을 대북 송금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이 다시 이 대표를 소환하거나 추가로 체포 등의 요구가 국회에 넘어오는 경우에도 이 대표 체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보인다. /연합뉴스



강제동원 해법·한일정상회담 규탄 범국민대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홍근 원내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 참석자들이 25일 오후 서울시청 인근에서 열린 ‘강제동원 해법 및 한일정상회담을 규탄하는 4차 범국민대회’에서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 국힘 김기현호 “정책 드라이브 세계”

### 정책위 산하 정조위 ‘풀가동’

### 69시간 논란 등 재발 최소화

국민의힘 김기현호가 박대출 신임 정책위의장 임명을 계기로 정책위 기능과 역할 강화에 나선다. 집권 여당 성직표는 민생 정책에서 판가름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6일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책위는 우선 박 신임 의장을 중심으로 산하 정책조정위원회(정조위) 기능 복원에 들어간다. 정책위에는 경제, 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6개 정조위가 있다. 각 정조위 위원장에게 관련 정책 쟁기를 강하게 주문하고 후속 조치를 점검하게 한다는 게 김 대표 방침이다. 특히 정조위 소속 의원들이 정책을 자체 개발하거나 정부에 정책 개발을 요구하는 한편, 민

생 현안이 발생하면 민심이나 여론을 꼼꼼히 살펴 논란을 최소화하는 식으로 ‘정조위 풀가동’에 나서도록 할 계획이다. 정책위의장 산하 부의장을 기존 1명에서 3~4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석부위원장에는 재선의 이만희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부의장을 여러 명 두는 건 당 정책위의를 당 중심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당은 앞으로 정부의 주요 정책 발표 전 당정책회의를 사실상 의무화하고, 비공개 실무 당정책회의도 수시로 개최할 계획이다. 김 대표는 지난 19일 취임 후 첫 고위당정책회의에서 “정책 입안 발표 이전에 당과 정부, 대통령실 간에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참모들에게 정책에 관한 정부·여당의 긴밀한 소통과 당의 주도적인 역

할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 개발의 또 다른 축인 여의도연구원 원장에는 조선의 박수영 의원이 내정된 상태인데, 박 의원은 오는 27일 취임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현역 의원이 여원 원장을 맡은 것은 2019년 김세연 전 의원 이후 4년 만이다. 김 대표의 정책위 강화 방침은 정권 교체 이후 빈번하게 불거진 정책 혼선과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두 달여 만의 ‘초등학교 5세 입학’부터 최근 ‘주 69시간 근로제 개편’ 논란까지 거센 반대 여론에 부딪친 정책들이 이번 당정간 협의의 부족이 있었고, 이는 당 정책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결과라는 게 김 대표 인식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책위 기능 강화에는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정국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셈법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 “농민단체 입장 듣고 종합판단할 것”

### 대통령실, 양곡법 거부권 신중 제주 4·3추념식 한 총리 참석

대통령실은 지난 2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 농민단체 등의 입장을 듣고 나서 거부권(재의요구권) 여부를 최종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6일 오후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농민들이나 농민단체 소속된 분들이 여러 입장을 표명하고 계신다”며 “그 입장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들어보고 전체적으로 종합적 판단해볼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법안이 담당 부처인 농림식품수산부로 넘어가면 재의요구를 검토하는데, 검토를 마친 다음 법제처로 다시 넘어가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그 다음 국무회의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15일이라는 기간을 법에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본회의 통과 직후 브리핑에서 “재의 요구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도 양곡관리법에 반대 입장을 밝혀온 만큼 사실상 재의 요구를 택할 것이라는 게 대체

적인 전망이다. 다만 선불리 ‘농심’을 자극하지 않고 먼저 설득에 나서겠다는 취지에서 거부권 공식화에는 가급적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편, 내달 3일 열리는 ‘제75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에는 한덕수 총리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작년에 당선인 신분으로 갔었다”면서 “올해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여러 일정이 있어 한덕수 총리가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4·3희생자 추념식은 2014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으며 추념식은 정부 주최로 열린다. 이 관계자는 저출산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여러 방안을 모으고 있다”며 “구체적인 정책도 있지만 저출산이라는 게 지원뿐 아니라 교육·부동산 등과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크게 보면 서 디테일도 쟁기는 과정”이라고 언급했다. 조만간 큰 틀의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 나서 추후 보충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연합뉴스

## 국수본부장에 우종수 경기남부청장 내정

### 정순신 낙마 한달 만 내부 발탁

제2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우종수(55·사진) 경기남부경찰청장이 내정됐다. 대통령실은 이같은 인선 결과를 오는 27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차기 국수본부장을 내부 인사 가운데 선출하기로 결정하고 최근 우 청장을 대통령실에 추천했다.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가 자녀 학교폭력 문제로 낙마한 지 한 달여 만이다. 서울 출신인 우 청장은 일선 수사부서 경험을 두루 갖춘 수사 전문가로 꼽힌다.

행정고시(38회) 특채로 1999년 경찰에 입직한 뒤 서울 용산경찰서장, 경찰청 인사담당관, 행정안전부 치안정책관,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 경기북부경찰청장, 경찰청 형사국장 등을 지냈다. 주러시아 대사관 주재관도 지냈다.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이던 2018년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수사를 지휘했다. /연합뉴스



우리지역 광주·전남 제품  
지역인재 고용창출에 앞장서는 기업

**스탠드형**  
사무실, 가정용  
어린이집, 유치원 특화제품

air purifier **DK**

**벽걸이형**  
경로당, 병원, 노인복지시설  
사무실, 초·중고 학교용 특화제품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

**DK** 디케이 주식회사